

“플랫폼 경제, 소상공인에 기회이자 위기… 상생 생태계 절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담회
“소상공인 포진 음식·숙박업 등에
가장먼저 ‘플랫폼 경제’ 도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불공정행위 감시 등 강화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중앙 여성)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조 위원장 오른쪽) 등이 정책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 업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과 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업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업 입점업체의 68.4%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

월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

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적용 제외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손해액 기준 배상한도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애로 2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264억 투입…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

2025년 글로벌 백신 생산 5국 목표
산업·보건부, 기술력 확보방안 모색

정부가 올해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개발 및 임상, 사업화 등에 총 12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상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내 자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대량생산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874억 원을 편성해 백신 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산업부는 2025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백신용 핵심효소, 부형제, 정제 필터, 레진 등 원부자재 6개 품목 국산 기술 확보와 mRNA 백신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기술은 있으나 자체 생산 설비가 없는 기업들을 위해 안동과 화순에 있는 백신실증센터를 활용해 백신 임상 시료 위탁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백신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K-NIBRT)’를 송

도에 구축해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부터 5년간 안동 백신실증센터 생산시설을 활용해 1200명에게 현장 실습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참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백신기업과 원부자재·장비기업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제품 활용 확대에 나선다. 분기별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점검하고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미약품, GC녹십자, 에스티팜 등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각자의 백신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원부자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 친환경 녹색기업에 4176억 지원

환경부, 에코스타트업에 5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1억 투입

우수 환경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4100여 억원의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녹색기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1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우수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중견기업과 제조공장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1176억원을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에 최대 5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사업은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7년 이내 기업 150여곳에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수 환경기술 보유 기업의 초기 시

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에도 392억원이 배정됐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새 활용 소재를 수급·가공하는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친환경·저탄소 설비를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 60곳에 최대 10억원과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환경산업육성사업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금리로 제공하는 ‘미래환경육성융자’에도 총 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메타버스 플랫폼 육성에 556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정투자·제도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556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논의하며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5대 핵심기술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위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해 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 메타버스 R&D(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안전기준 상향

정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 안전기준으로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5.7%까지 줄었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 등

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우선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례체계 확립에 나선다. 유해물질 안전 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회를 참여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